

건설소식



CONSTRUCTION NEWS

서울시 건축물 ‘석면지도’ 만든다

2011년까지 40억 투입 이후 민간 건축물로 확대

| 서울시는 시 소유 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제작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012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도 적용,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약 40억원을 들여 시 소유 의료·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업무용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제작, 관리키로 했다.

석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200만톤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분석, 관리는 미흡해 지적받아 왔다.

이번 서울시의 석면관리계획은 정부안(지난 7월 발표)보다 2년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 1단계로 하반기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m² 이상의 152개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의 건축물 972곳은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총 1,124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농도 분석을 실시, 석면유무를 확

인한 뒤 석면으로 확인된 건축자재를 건축물 평면도에 석면함유 농도와 자재상태 등을 표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석면함유건축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산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사전 제거 또는 비산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된 석면지도를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와 석면 사용자재 점검·관리요령 등을 담은 ‘석면관리 매뉴얼’도 제작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먼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을 철거 할 경우 주변의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권고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할 경우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하역사와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주기를 기존 5년에 1회에서 연 1회 또는 2년에 1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지도를 제작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석면관리 종합대책도 마련, 서울지역 석면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메신저 서비스 보완

| **조** 달청이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를 대폭 보완해 건설업체들의 입찰정보수집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1년여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입찰공고, 수정공고, 연기공고, 개찰시간의 알림기능 등 나라장터 메신저 서비스를 해당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등에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요청한 입찰공고 건을 나라장터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서 연계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별도로 나라장터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즉시 입찰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신저 서비스는 계약서 등의 전자 문서 수신알림 기능, 입찰 및 계약정보 검색기능, 관심 키워드 알림, 맞춤형 화면구성 설정 등 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고도화한 나라장터 메신저2.0을 제공한다.

조달청, 인증서 불법 대여 차단

| **인**증서 불법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

기술이 전자입찰시스템에 도입된다.

조달청은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단계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입찰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정상 입찰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일부 입찰자들이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우선 10월부터 도난 및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전화 입찰에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 확인을 시범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PC 입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문정보를 이용한 PC입찰은 1차로 시설공사에 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수요 기관 자체 입찰 및 물품·용역 등 전자입찰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 '종합·전문'으로 동시 입찰 안돼

양쪽 자격 있어도 선택해 참여해야 … 전문업체도 한가지 공종만 가능

| **도**지공사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입찰에서 종합건설

사가 전문건설사로 등록돼 있어도 종합과 전문 양쪽 자격으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건설사 역시 여러개 전문공종에 등록돼 있어도 한 가지 공종만 선택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으로 발주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 구간) 건설공사에 이 같은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을 확정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종합과 전문에 모두 등록된 건설사의 경우 양쪽 자격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이를 종합이나 전문 한 쪽만 선택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종합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A사가 종합건설업체와 철콘공사업체로 중복 등록돼 있을 경우 이를 인정치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계열사가 있다고 해도 두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건설사가 중복 등록돼 있는 경우 마찬가지다. 일례로 철콘공사업과 강구조공사업 모두 등록돼 있더라도

도 둘 중 한 개 공종만 선택해 공동수급체의 전문업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전문업체 참여 기회를 보다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또 공사규모가 큰 철콘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사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이 역시 공사참여업체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업체가 많지 않은 강구조공사업에는 2개사 이상 참여조항을 배제 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이 같은 사안을 확정하는 대로 주계약자공동도급 시범사업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해양부에 이어 노동부도 이같이 해석함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고용보험료 납부업무를 위임하고도 보험료는 지불해주지 않는 폐단이 고쳐질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반드시 명시하고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또 “하수급인이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만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원수급인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 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업체는 노동부에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있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산재·고용보험료의 내역서 명시 여

부 및 보험료를 실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 이같은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부가 해외건설 공종 1순위 → 그린에너지 · 환경플랜트

정유 등 일부 공종 편중 탈피

우리 건설업체들이 가장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1순위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공종으로 그린에너지와 환경플랜트, 원자력 및 담수화 플랜트가 꼽혔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데다 외화가득률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시장 성장성도 유망하며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해외건설협회가 시공·엔지니어링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고부가 해외건설 공종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들 전문가는 그린에너지와 환경플랜트 공종이 향후 가장 급격한 시장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담수화플랜트와 CM·PM, 원자력플랜트, 고속철도, 지능형 고속도로, 신도시개발, 초고층빌딩, 초장대교량, 가

하도급업체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지급해야

노동부 유권해석…종합업체 횡포 바뀔지 주목

우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하수급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지급, 신고·납부도록 해야 한다는 노

스플랜트 등도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화력발전 플랜트 등 현재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이 많은 공종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평가했다.

담수화 및 원자력 플랜트와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국제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아 향후 진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대로 CM·PM과 그린에너지 플랜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외화가득률과 타산업 해외진출 유발 등 파급효과는 신도시개발과 담수화 및 원자력 플랜트 공종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업계,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바람'

고인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재해를 예방하려는 건설업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건설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의 시스템 구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 대한설비건설협회 KOSHA18001 신규 인증 회원사 현황

상호	대표자	인증현황	인증기관	지역
(주)동인엔지니어링	김국수	KOSHA 18001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경북
대야공무(주)	김철, 이경			서울
덕화건설(주)	이낙완			경북
한양이엔지(주)	김형육			경기

(KOSHA 18001)이 도입된 이래 시스템인증을 취득한 건설업체는 모두 4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HA 18001 인증이란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보건안전기준에 따라 공단이 도입한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가리킨다. 정량화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안전활동으로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달성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이 인증을 취득한 건설관련 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및 공공발주 기관 18곳, 우진아이엔에스 등 전문·설비건설업체가 24곳이었다.

특히 작년부터 올 8월 사이 시스템 구축을 마친 건설업체는 쌍용건설과 GS건설 등 2개 종합건설업체와 금아산업 등 19개 전문건설업체로 집계됐다.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현재 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도 11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8개 업체가 전문·설비건설업체로 나타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문 업종의 관심과 의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삼성건설과 현

대건설 등 이미 인증을 취득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관리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협력업체들에게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등록이나 우수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우대해주는 대형건설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자율안전보건 인증제도는 당초 종합건설사와 발주기관에 한해 실시돼 왔지만 2007년부터는 전문건설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전문건설사가 인증을 취득하려면 종합건설사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바닥 온도제어방식, 온돌난방 최적

대류 제어방식 대비 최대 57% 에너지 절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각방제어방식에 있어 실온을 제어하는 대류제어방식보다는 방바닥 온도

제어시스템이 에너지절감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온돌학회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실온제어방식인 대류제어방식의 제품을 사용, 난방온도를 조절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낭비와 난방부하로 인한 편난방 현상 및 설비수명 단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수온돌을 이용한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제온돌학회는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2개 단지와 유사 평형대 및 동일 난방방식의 비교 대상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는 △삼천리 도시가스 안양2고객센터 2개소(안양 H, 안양 Y) △서울도시가스 (주)해피그린 1개소(우장산 S) 등 3개소에 대해 이뤄졌으며 안양 H단지와 우장산 S단지는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이, 안양 Y단지는 ON-OFF제어방식이 적용돼 있다.

국제온돌학회 관계자는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안양 H단지와 미설치된 Y단지의 비교결과, 최고 57%에서 최소 31%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됐으며 4개월 평균 절감율이 41.9%로 나타났다”며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이 적용된 우장산 S단지와 안양 Y단지의 비교 결과 최고 47%에서 최소 32%의 사용량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방바닥 온도제어 시스템의 기능적 특성인 방바닥 비례제어 기능이 탁월하다는 것과 에너지 절감 및 난방부하에 따른 편난방 현상 같은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따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결과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난방수요가 급증되는 12월에서 2월 까지의 절감율보다 11월의 절감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이에 대해 온돌학회는 일교차로 인해 보일러의 가동주기가 짧아져 그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와 난방부하의 발생이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단지에서 발생하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분석했다.

온돌학회 관계자는 “방바닥 온도제어시스템은 온돌난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대류난방제어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온돌의 열환경 특성과 생활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제어시스템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온돌난방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공기온도제어방식은 바닥온도제어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바닥온도제어방식으로 국제기준이 제정돼야 에너지도 절감되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나라의 전통난방법이 계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체이율 20%로 낮춰

| **공** 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 했을 때 적용되는 지연 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급금 등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이율은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이 지나고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1999년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 정도로 낮아졌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